

활기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特殊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ISSN 1227-7053 TEL.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568-5595~6
FAX. 568-6653

(月刊) 第115號 THE FISHING PORT NEWS 1997年 7月 25日(金曜日) (1)

다기능 어항 확충 수산업 고도화 촉진 어항중심 소득원 개발 생활환경 개선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세기 해양수산비전 공청회서 지적

어항을 수산업 기능 위주 뿐만 아니라 개발함으로써 어항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곤란한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어촌종합개발을 위해서는 어항지정을 확대하고 다기능 어항시설을 확충하여 수산업의 고도화 지원과 어항을 중심으로한 어촌 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3일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21세기 해양수산비전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입개발 및 신해양질서에서 따른 수산업구조조정 어촌종합개발 방안이 발표되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정봉·최성애 연구원은 지정어항이 없는 권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비

의 대부분이 방파제 선착장 등 어업기반시설에 투자되어 소득원 개발사업부문에 생활환경 개선부문 개발이 미흡하며, 또한 관광개발여건이나 개발가능성 및 경제성에 관한 검토보다 지역안배 등으로 인한 분산투자로 주민참여의 소극성 및 어촌생활환경 개선이나 사회 하부구조개선 등과는 연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리고 다기능 어항시설 확충으로 수산업의 고도화 지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항개발을 위한 어항지정의 확대 △어항의 종류, 규모, 여건에 따라 기능별 배치 및 체계적인 개발 △어항개발 촉진 및 이용도 제고를 위한 민자유치 적극 추진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어항법 개정 △지역여건에 따라 관광·교통·유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기능어항을

개발 △지역별 기능별 특성에 부합되도록 어항지정기준을 해역별 특성에 따라 재정립, 수산업 외적 기능강화를 위하여 지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정어항의 기본시설이 완비되었거나 투자계획이 수립된 어촌을 집중개발 △전국 연안의 어촌을 225권역으로 구분, 어촌의 기반시설 및 수산물 가공·유통 공간시설의 지원 추진 △소규모 항포구 중 어항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곳은 어항으로 지정 개발 △도시 근교형·연안촌락형·낙도벽지형 등 어촌입지 실정을 고려한 생활환경정비 △2000년까지 전국 연안어촌의 실태를 파악하여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해양문화·휴양을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의 전 과정에 자연친화적 어촌관광 과정을 지역주민의 참여로

최근 한국경제가 무척이나 어렵다고들 말한다. 기라성같은 재벌 기업들이 맥없이 픽픽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기도 하다.

그 원인을 놓고 또한 말들이 많다. 그러나 이를 한마디로 잘라 표현한 것이 세계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물건만 만들어 팔면 이익이 보장되던 그런 경제환경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한다면 파는 자의 가격에서 사는 자의 가격으로 경제행위의 주도권이 변화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쟁력있는 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왜냐하면 투자없이 경쟁력을 갖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항어촌에 대한 투자의 당위성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3면으로 둘러싸인 바다라는 자연적인 투자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인위적인 투자가 가미되면 「휴식에 물린 진주」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토보존 및 개발, 유지 관리의 차원에서 동서남해 해역별로 지정항을 대폭 확대하여 어촌지역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국토개발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 연안에 분포되어 있는 지정항은 현재 408개로 항간 평균거리가 28km나 된다. 일본의 항간거리 11km와 비교해보면 무려 2.5배가 넘는 거리이다.

이런 항간거리는 기상악화시 어선의 안전대피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막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만들고, 결국 수산업 경영을 부실하게 만든다.

따라서 항간거리를 줄여야 한다. 지정항을 확대하여 항간 거리를 최소한 20km정도로 단축시켜 지체없이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어촌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전국 어항어촌이 균형개발됨으로써 잊혀진, 그리고 묻혀진 우리의 보고 바다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돼 어려운 우리의 경제환경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확실하다.

일본의 경우 어항어촌 개발을 위해 수십년에 걸쳐 수산업예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20% 수준에 머물고 있음은 어항어촌에 대한 당국의 인식이 어느정도 인지를 가늠케 한다. 21세기를 앞두고 집중전략의 관점에서 정부가 아니면 불가능한 어항어촌 건설 위해서는 우선 최소한 수산

예산의 40% 이상은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어항어촌을 어촌지역사회의 핵이 될 수 있도록 관광 친수성 레저단지나 도·농·어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지역활을 다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활력있는 어항어촌으로 개발해야 한다.

주말이나 연휴, 혹은 휴가철이 되면 갈 곳이 없는 수많은 잠재 고객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관광적자가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난다고 하면서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면 불만만 데가 없다는 불평을 언제까지 감수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것을 어항어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과거의 관광이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었다면 현재의 관광은 직접 체험하거나 휴식을 위한 것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이로 인한 부대수입이 크게 늘어난다면 떠났던 우리의 젊은 인력을 다시 유인하게 됨으로써 어항어촌이 살아 움직이는 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점효과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수입개발화시대를 맞아 어항을 현대적 수산물 유통기지화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수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됐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비용절감외에는 묘안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수산업도 경쟁력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대적 수산물 유통기지를 곳곳에 설치하여 물류비용을 최소화시킨다면 결코 비관적인 산업이 될 수 없다.

한단계 뛰어넘어 그 유통기지를 수입 수산물 중계기지로 만들어 중개무역중심지로 활용한다면 수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투자가 문제이다. 이미 부정적인 시각으로 결정을 해놓고 어항어촌을 바라본다면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 번쯤 뒤집어 생각한다면 이 이상 가능성있는 산업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언제까지 「투자는 적게 과실은 많게」라는 그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기에 허송세월을 보낼 것인가. 과감한 투자만이 우리나라 어항어촌을 살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새로운 투자 대상 「어항어촌」

국토보존 차원서 관리 해역별로 지정항 확대

집중전략 관점에서 어항어촌 개발해야

서해안에 첨단해양도시 건설

한려해상공원과 연계 해양문화 휴양어촌도 조성

정부는 수도권과 인접한 서해안에 해양연구 및 교육 시설, 해양레저시설 등이 들어서서 첨단해양산업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또 설악산 및 경북지역일대에 해양문화·관광·휴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규모 해양관광 휴양단지를 건설하고 부산항과 마찬가지로 울산항에도 해양박물관 등을 갖춘 해양종합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협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21세기 해양수산비전 공청회에서 해양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전국해역 5대 권역별개발구상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이같이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서해중부권의 경우 영종도 신공항, 인천항, 아산항 등을 연결하는 해양과학기술연구단지와 해운산업단지, 물류단지, 국제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해 해양과학산업기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수도권 입해도시 인근에는 해양연구 및 교육시설, 해양레저시설,

연안해운 및 물류처리시설 등이 갖춰지는 첨단해양산업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또 동해권에는 설악산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대규모 휴양기지를 설악권 및 경북권에 건설키로 했으며 통일에 대비해 강릉에 대규모 수산물류센터 건립키로 했다.

이와함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개발키로 한 남해중·동부권의 경우 울산항에 부산항과 마찬가지로 해양박물관, 친수공간이 갖춰지는 대규모 해양종합공원을 조성하

고 감천항을 원양어획물 양륙 및 수산물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연계되는 해양문화·휴양어촌을 건설키로 했다.

또 목포항과 남해안 청정해역을 중심으로 수산해양관광기지를 집중 육성키로 하고 남해안 연륙지역에 해양수산관광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남해안 청정해역 및 제주도 수산물 생산기지와 해양레포츠 등 해양문화·휴양이 어우러지는 휴양레저레포츠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신한국당 중앙위원회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장)은 앞으로 예산심의의 활동과 당정협의회에 참석한다.

이는 신한국당의 당내 인사의 참여 폭을 확대한다는 당의 기본방침에 의해 부처별 예산 심의회의와 당정협의회에 해당 중앙위원을 참석시키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손정식 회장은

孫井植 회장, 98예산 심의회의 참석

지난 10일 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분야의 '98예산 요구현황 심의회의의 참석을 비롯, 앞으로의 예산심의의 활동과 함께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게 된다.

이와함께 신한국당의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회 소속 예결위원은 이강두 의원(간사·거창 합천), 이완구 의원(청양 홍성), 주진우 의원(고령 성주)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정책의 발전방향' 강연



辛相佑 해양수산부장관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2일 수협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21세기 해양수산비전」공청회에 참석, 8일에는 경제장관 조찬간담회 및 국무회의에 참석,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 9일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해양수산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강연, 11일에는 국제해양법전문가 회의를 갖고 최근 일본의 한국어선 연쇄나포 및 가혹행위에 따른 외교적 마찰에 대해 토의와 함께 국민의 화합된 민족 에너지를 모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孫井植 한국어항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7월10일 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98예산 요구현황(농림 해양수산 분야) 심의 회의에 참석, 15일에는 경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 18일에는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일 어업분쟁 및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기선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 19일에는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신한국당 대통령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 21일에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신한국당 제2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 22일에는 63빌딩에서 열린 대통령후보자 선출 축하연회에 참석, 24일에는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한 한·미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신문화연구회 주최 제14회 정신문화포럼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7월10일 한영호 부경대 총장과 '산학협동 및 기술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 14일에는 탑골공원에서 수협임직원과 어업인,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어선 피납 규탄궐기대회를 거행.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7월5일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 상반기 업무실적 평가 및 하반기 업무활성화를 당부하고 미등록어선 정비와 관련 대어민 봉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7월4일 제1회 전국실업검도대회와 97 동서 고단

자대회 개최식에 참석, 11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에 참석, 17일에는 범죄예방 광주지역 운영위원회에 참석, 18일에는 광주전남 21세기발전협의회가 주최한 고등학교 과정 장학생선발 심사회의에 참석, 22일에는 국제인권보호한국연맹 오찬간담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7월11일 광주농고 총동창회 이사회를 개최, 17일에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수련대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7월4일 신한국당 서울시지부 고문에 주대, 8일에는 전경련 주관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위원회에 참석, 19일에는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신한국당 대통령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7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임원상견례에 참석, 8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제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임명장 수여 및 업무보고회의에 참석, 11일에는 제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를 개최.

▲장정연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회의에 참석, 15일에는 제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를 개최, 24일에는 섬관광

정책포럼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7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임원상견례에 참석.
▲임제호 삼오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7월11일 한·일 친선협회중앙회 제주협회 97 정기총회에 참석.
▲임광수 임광토건주식회사 회장은 지난 28일 세종호텔에서 충북협회 9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충북도내 효자호부를 표창.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7월22일 여수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을 격려.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1급 승진 △국립수산물진흥원장 배평암 □국장급 전보 △어업진흥국장 박재영 □국장급 승진 △감사관 김성규 △국제협력관 안국진 △해양정책실 안전심의관 이은 △국립수산물진흥원 적조연구부장 김학균 □과장급 전보 △총무과장 이재균 △장관비서관 이인수 △어업진흥국 어선정책과장 이광수 △해양정책실 선박안전과장 김종의 △수산정책국 무역진흥과장 정재홍 △국립수산물검사소 검사과장 손부일 △"부산지소장 이진주 □과장급 승진 △국립수산물진흥원 서무과장 김익수 △"동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최문환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장 김승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금정(7월1일) □부이사관급 승진 △해운선원국 연안해운과장 이광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양병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과장 천인봉 △국제협력관

실 국제기구담당 송성호(7월10일) □서기관급 및 사무관급 인사 △총무과 강인남 △국제협력관실 오충신 △투자심사담당관실 남광물 △해양정책실 선박기준과 이능호 △해운선원국 노정과 이상억 △항만건설국 항만기획과 안병욱 △수산정책국 수산기공과 허삼영 △어업진흥국 어업지도과 정영훈 △어촌개발과 조진춘 △"어업인육성과 박준영 △국립수산물검사소 검사와 김중봉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강영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손창연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해무과장 강신열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민성규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호선장 이기종 △"무궁화2호선장 김희주 △"무궁화4호선장 정대운 △"무궁화12호선장 원태중 △"무궁화16호선장 우병화(7월14일)
▲한국어선협회 인사 △전무이사 김하섭 △감사실장 오영조 △홍보실장 홍석규 △기획관리부장 김영식 △검사관리부장 이화우 △동해지부장 현종길 △여수지부장 박정복 △포항지부장 김옥환 △완도지부장 김영구 △마산지부장 윤병홍 △제주지부장 윤완용(7월1일)

변경

▲웅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홍성보)은 최근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385-19번지로 주소를 변경했다.
▲송재성(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씨는 최근 서울시 서초구 1495-1번지 현대빌라트 902호로 주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3486-9017
▲이재현(주식회사평원엔지

니어링 사장)씨는 최근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311번지 삼호아파트 6-704호로 주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552-5325
▲이상우(일은증권 강남지점 고문)씨는 최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21 샘마을 한양아파트 114-701호로 주택주소를 변경했다.
▲이현수(교통안전공단 교육원장)씨는 최근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 라인아파트 101-303호로 주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684-0810

회원가입

▲권혁주씨(세일종합기술공사 항만부)
▲박호성씨(진도군청)
▲김광섭씨(속초시청)
▲김병득씨(고흥군청)
▲이경배씨(서귀포시청)
▲박철훈씨(장흥군청)

회비납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주식회사삼건사(회장 정덕용)
▲금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재철)
■개인
▲안중철씨(전 수협부회장)
▲권혁주씨(세일종합기술공사 항만부)
▲박호성씨(진도군청)
▲김광섭씨(속초시청)
▲김병득씨(고흥군청)
▲이경배씨(서귀포시청)
▲박철훈씨(장흥군청)

음

▲이창기(전 수산청 과장)씨가 지난 6월 29일 별세했다. 장지는 안성천주교 묘지.

공공공사 입찰·계약제도 개선 필요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에 대비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경우 각종 규제의 완화와 하도급부조리 및 공공공사입찰·계약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KDI 대회의실에서 '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는 산업정책적 시장개입과 경쟁제한적 기업관행이 확산되어 있는 우리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KDI는 '건설부문 경쟁라운드'의 대응방안'을 통해 WTO체제의 출범과 정부조달협상의 타결로 국내 건설시장도 폐쇄적인 시장구조하에서 보호주의의 산업정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는 분쟁의 소지가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설관련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건설산업은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수요자가 사전에 최종재를 다룬 완성재와 비교해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적정한 경쟁'이 아닌 '가격만의 경쟁 체제'를 띠기 쉽고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보다 경쟁체제면에서 문제점이 커 경쟁라운드협상이 구체화될 경우, 미국, EU등에서 문제제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KDI는 경쟁라운드를 주도하고 있는 EU국가들이나 미국은 적절한 경쟁시스템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해 경쟁의 틀을 재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부실시공방지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시장에서 자국 건설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차원의 정책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조세나 반트러

스트법 등에 있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경쟁라운드에서 미국측이 국가간의 차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건설관련 여러정책 가운데 공공공사의 입찰 계약제도 및 이의 운용과 관련된 개선책도 경쟁메카니즘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공사시행과 관련된 수요처나 각 인·허가 기관에 까지 부실벌점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관련 업체나 기술자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일정한 점수에 이르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부실벌점제를 발주처나 공사시행과 관련된 인·허가 기관에 의무적으로 운용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부실벌점제 운용여부가 임의화돼 있어 건교부 산

다고 말했다. KDI는 건설관련 여러정책 가운데 공공공사의 입찰 계약제도 및 이의 운용과 관련된 개선책도 경쟁메카니즘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기관 및 일부발주처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이로인해 이들 발주처에서 부실벌점을 받은자만이 불이익을 당하는 등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앞서 최근 건설기술관리법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부실벌점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대폭 수정,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부실벌점 경감점수가 과다한 이유로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바탕위에서만 정부가 각종 제도의 운용에 임의로 개입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업과 관련된 규제완화와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질적인 하도급부조리를 추방하고 부실한 건설업자들을 시장경쟁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실벌점제 전면 확대 검토

우수시공업체 벌점경감 최고 5점으로

우수시공업체 및 발주기관 표창을 받은 업체 등에 부여하는 부실벌점 경감점수를 종전 15~30점에서 최고 5점으로 대폭 경감했다.

또 종전에는 발주기관 표창 등에 대해서는 관련협회가 최종 집계한 평균 부실벌점에서 관련점수를 경감, 그 효과가 컸으나 앞으로는 발주기관 평균벌점에서 감점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실벌점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 및 1억 5천만원 이상 설계·감리와 발주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공사 설계 감리(민간분야에도 부과 가능)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조선에 오염방지분담금

해양수산부는 해양에서 잘못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의 방제를 담당할 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 방제정 등의 시설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따라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항구에 입항하는 유조선은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12원, 일반선박은 톤당 6원, 항만에 설치된 기름저장시설은 유류입하량 1백 리터당 11.04원의 분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 분담금은 2001년까지 7백억원 정도가 거두어질 예정이며 방제조합은 이 재원으로 최첨단 방제정 5척을 포함한 23척의 방제정, 각종 방제장비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

분담금을 내야 할 유조선은 총톤수 5백톤 이상, 일반선박은 1만톤 이상이 대상이며, 2002년부터는 분담금이 40%로 줄어든다.

기능 다양화 지역적 차별화 추진돼야

農經研 어항어촌종합개발 방식 도입 제시

현재 수산업 일변도의 어항지정기준은 해상교통 및 물류기지, 생활중심지, 어촌 관광지로서의 어항개발을 제약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주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상교통항이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개발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항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된 곳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개발잠재력은 높지만 개발이 안된 어항은 지정에서 제외되어 계속 낙후된 곳으로 남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수행하고 있는 '어항지정개발에 관한 조사연구'의 중간 자문 회의에서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또 농특회계 도입 이후에 투자절대액이 크게 늘어났으나 수산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이 23.7%로, 일본이 1988년 이후 60% 이상을 유지해 온 데 반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1·3종어항에 편중 투자되고 있는 것이 어항개발 낙후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현재의 제1·3종, 제2종, 소규모어항 등 4종류의 어항을 광역중심, 지구중심, 기초어항 등 3종류로 단순화시켜 재지정하여 수산업 지원기능 외에 교통물류기능, 관광기능, 생활거점기능을 중요시하는 등 어항기능의 다양화와 지역적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광역중심어항 및 지구중심어항까지 국가가 직접 개발 관리하고 기초어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되 시설물에 따라서 국가의 직접건설 내지 보조금 지원 방안 등 어항개발체제 개선의



■ 농경연은 현재의 제1·3종, 제2종, 소규모어항 등 4종류의 어항을 광역중심, 지구중심, 기초어항 등 3종류로 단순화시켜 재지정하여 수산업 지원기능 외에 교통물류기능, 관광기능, 생활거점기능을 중요시하는 등 어항기능의 다양화와 지역적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단지 어항 만을 별도의 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존의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항개발사업을 연계, 특히 기초어항의 개발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어항 어촌종합개발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매립을 통한 용지창출, 위관장,

급유, 제방시설 등 기능시설의 설치로 인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민자유치에 의한 어항개발의 촉진도 강조했다.

건설공사 시행절차 규정 마련

工期지연 설계변경 등 시행착오 예방

기획·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공사 전과정의 시행절차를 담은 건설공사시행절차 규정이 연내 제정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지연, 설계변경, 클레임요구 등 각종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을 체계화·표준화한 건설공사시행절차 규정을 연내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사업기획단계에서 건설사업 기본계획고시제를 도입해 주민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과 취소 등에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

또 조사단계의 경우 타당성조사 항목을 강화하고 시행세부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토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 예산편성시 일정비율의 예비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설계단계에서는 원칙적으

로 용지보상 및 인·허가 절차와 관계 부처협의 완료 후 공사를 발주토록 의무화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충분한 기자재를 확보함으로써 기자재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시설물 준공전에 발주자나 대리자로 구성된 유지관리팀을 구성해 시공사로부터 시설물의 인수, 운영, 유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어항시설 이용선택에 사용료 부과 인천시

인천시는 어항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해 소요되는 매년 25억원의 예산절감을 위해 인천시 관내 어항을 이용하는 어선 등을 대상으로 시설 사용료 등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웅진, 강화, 영종, 용유 등 관내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선박들에 대한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가 빠르면 오는 8월부터 부과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어항시설 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을 제정, 지난 22일 인천시의회 제54회 임시회에서 확정했다.

대상지역은 각 항마다 20

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 중구 영종, 용유 지역 6개항과 서구의 세어도, 강화지역 8개항, 옹진군지역 18개항 등 모두 33개항이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협, 군사목적 사용어항 등은 사용료 및 점용료가 면제되며 수산물 하역작업선, 낙도보항로 여객선, 환경오염방지선 등은 50% 감면된다.

징수금액은 이달안으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는대로 선박의 톤수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 적용할 방침이다.

해양 엑스포 단지 조성

전남도, 1백만평에 1조5천억 투입

전남도는 오는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에 민자 등 모두 1조5천억원을 들여 각종 첨단 박람회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해양엑스포단지 조성 계획안을 잠정 마련, 내년부터 해안지역에 1백만평 규모의 적격지를 물색해 세계 1백50여 개국에서 내방하는 3천만명의 관람객을 수용하는 박람회단지를 조성하기

로 했다.

해양엑스포단지에는 미래해양도시관과 해양자연관, 해상왕 장보고관, 해중식물공원 등 각종 전시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편의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도는 이달중 엑스포유치대책본부를 설치하는데 이어, 연말까지 기획단을 가동해 내년 3월에 유치조직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建協 '건설정보센터' 하반기 설립

대한건설협회는 급격한 건설환경변화에 대응, 회원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중 건설정보센터를 설립 운용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단체 가입 임의화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과 단위로 운용 중인 민원봉사실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확대 개편한 건설정보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건협이 추진중인 건설정보센터는 일본의 JACIC(일본건설종합센터)와 비슷한 것으로 건설업경영분석 등 협회 발행도서는 물론 건설관련 각종 자료에 대한 신속한 전달체계를 구축, 회원업체에 대한 서비스질을 높이려는데

설립의 목적이 있다.

이를위해 건협은 본회와 지방 시·도회간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온라인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협은 아울러 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회원관리 부실발점관리 등 현재 각 실·팀이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각종 정보관리현황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에대한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협은 또한 민원상담위원의 정예화 및 관련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민원봉사체계의 내실화를 적극 유도, 민원처리의 윈스톱 서비스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선진 어항어촌건설에 앞장 서겠습니다

主要業務

- 港灣의 開發조사, 整備, 計劃, 設計
 - 一般港, 工業港, 漁港
 - 防波堤, 防潮堤, 浚渫工事
 - 各種 港灣施設, 海洋構造物
 - 港灣施設의 安全診斷
- 各種土木工事의 計劃, 設計
 - 調査測量(陸上 및 水深)
 - 上·下水道
 - 地域 및 都市計劃(公園造成)
 - 道路 및 空港
 - 各種 運動施設
- 工事施工監理
- 環境影響評價代行

株式會社 唯一綜合技術團

會長 李炳周
技術士(上·下水道) 李炳周
代表理事 李義允
技術士(港灣 및 海岸) 李義允

서울特別市 麻浦區 東橋同 174-13
TEL (02)336-1854, 324-8954, 338-5971
(051)441-1811~2
FAX 338-7586

業種

- 專門技術用役業
 - 技術部門 : 建設部門
 - 專門分野 : 港灣 및 海岸, 上·下水道, 地域 및 都市計劃, 도로 및 空港
- 一般測量業
- 工事施工監理專門會社
- 海外建設業(建設用役)
- 環境影響評價代行業
- 廣域境界測量代行業

